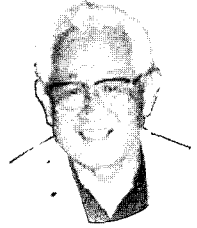


환경경영의 부리를 내리자



노재식

본지 편집위원장/대한민국 학술원 회원/IGBP 한국위원장

서독과 동독이 통일한지 약 1년쯤 지난 무렵 필자는 독일연방공화국 하원 초청 방문시찰을 한 바 있다. 학계, 관계, 언론계 그리고 환경운동계 인사 등 여섯명과 함께 독일의 환경정책과 기술현황을 살펴 보기 위함이었다. 왕복 18일간에 걸쳐 둘러 본 다음 인상깊게 남은 것은 독일정부의 환경기술에 대한 전략적 정책개념 (Strategic Policy Concept)이 예방(Prevention), 재활용(Reutilization) 그리고 제거/처분(Removal/Disposal)에 바탕을 둔 것이었음을 알게 된 점이었고 또 하나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루는 주요 정책이 감량(Reduction), 순환(Recycle) 및 재사용(Reuse)으로 구성된 이른바 3R전략임을 확 인하게 된 점이다.

약 3년전 늦가을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정책분야의 각종 워크샵, 세미나 및 학술대회가 잇따라 개최되어 국민들의 관심을 끈 바 있다. 특히 "환경을 지키려면 각종 물자를 마구 사용하는 과소비 행태부터 먼저 바꿔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는 발생량 자체부터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서는 풀뿌리식 환경친화적 소비자세로 하루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폐기물 발생의 억제 및 감소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기억난다.

이와같은 결론은 포장·용기 쓰레기를 제조회사 책임하에 재활용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결과 전체 포장쓰레기의 86%('96년 현재)를 수거할 수 있었고 그 중 84%를 재활용하였다는 독일 자원재생공사(DSD)측의 발표에 작지 않은 힘을 입은 것이었다고 회고된다. 아울러 좁은 국토면적에 인구밀도마저 높아 쓰레기 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우리나라로서는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가 가장 효과적이며 종량제 개선과 함께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쓰레기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름길임을 재확인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렇지 그 무렵 우리 협회가 공모한 전국 중·고교 학생 수필중에는 환경과목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 지도하에 확산된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누어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운동에 관한 작품이 유난히 많았다. IMF의 지원을 받아야 했던 금융 위기의 여파라고도 볼 수 있었지만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앞서 열렸던 한 공청회를 주재한 필자로서는 이러한 응모추세에 남다른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공청회 진행 과정에서도 참여자들이 염려한 바 있었던 분리수거 문제는 아직 까지도 만족할 만큼 확립되어 있지 않아 답답하다. 이와 같은 느낌은 동네 슈퍼마켓에서 쓰레기 봉투를 살 때 더욱 그러하다. 그것은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해 놓은 분리수거함의 쓰레기 성상별 표준화가 잘 안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성의없이 이루어진 쓰레기 성상별 분리투입과 수거 후 실지 처분과정의 미흡도 당초 취지를 흐지부지하게 한 동인(動因)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분리수거에 참여하는 각 가정의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끔 반상회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철저히 홍보·계도함으로써 이에 관한 지식을 숙지케 하여 폐자원의 재활용과 환경보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할 것 같다.

한편 음식물쓰레기인 경우, YWCA등 민간단체 주도로 생성량 줄이기와 재활용을 적극 실천하는 우수 음식점을 "환경사랑음식점"으로 선정·홍보하는등 환경친화적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시스템의 개선과 자원회 시설 확충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쓰레기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줄이고 재활용

함으로써 깨끗한 사회를 건설함은 물론 물자를 아끼는 정성을 키우는 수단 또는 도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가을 정부(건설교통부)는 국제유가(油價) 급등을 염려한 나머지 에너지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매월 첫 월요일을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정하였고 그 효과로서 월간 33억원 상당의 에너지절약을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을 가장 술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마저 그러한 날이 정해졌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자가용차로 출근하였다는 비난조 보도를 시정환(지난해 12월 4일) 필자는 작지 않은 허탈감을 느꼈다. 대도시 대기오염이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에 비롯되고(서울의 경우 85%) 특히 도심지 운행빈도가 가장 잦은 시내버스의 오염비중이 크다고 해서 매연이 거의 없고 오존 원인물질도 현저히 저감할 수 있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까지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측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의 이들 공무원의 자세를 공무원이 아닌 국민대중은 과연 어떤 시각에서 보겠는지 생각해 볼만한 일이다.

가뜩이나 녹지공간의 절대 부족과 심각한 대기오염이 대도시 시민들을 시외곽으로 몰아내고 있으며 이것이 또 대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난(亂)개발로 이어짐으로써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의 공급원인 생명의 숲을 사라지게끔 작용하고 있다.

그간 그린벨트 제도는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국토의 합리적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바탕을 이루는 제도였다. 지난 30년간 이룩한 유례없는 고도의 성장 과정속에서도 그린벨트는 무질서한 도시 팽창과 환경파괴를 막아준 보루로서 큰 역할을 다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환경단체와 수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의 조급한 그린벨트 해제방안의 부당성을 누차 제기하면서 그린벨트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연구를 통해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 목소리를 무시한 채 그린벨트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는 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그린벨트가 국토의 생명벨트이기 때문에 보전되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숲에 대한 문화적 요구가 순리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게 있다.

이 점 신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 운전자에게 3년간 의무적으로 소형차를 소유토록 규

제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나 대로변에 설정한 주차장의 차간 구획을 소형차의 적합하게끔 그어놓는 등 소형차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 개선에 인간 힘을 쓰고 있는 선진국의 제도적 노력을 과감히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최근 몇십년간에 이룩한 경제성장 배후에는 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담수(淡水)의 적기·적량 공급에 지속적 압박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에 더하여 현재도 진행중인 지구온난화(최근 IPCC 보고에 의하면 21세기말까지 지역에 따라 1.5°C 내지 6°C 상승할 것으로 예측)와 사막화현상이 이어지는 한 담수 확보문제는 21세기에 사는 인류와 지구생태계에 더 더욱 어려운 측면을 노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은 "세계 천연 수자원의 포괄적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21세기에는 전지구적 물 부족으로 각국의 경제·사회개발이 제halt되고 쑥가간 잠재적 분쟁요인이 될 전망이라며 식수난의 심각성을 경고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부터 담수 자원의 적기 확보·공급에 차질이 일어나는 사태가 생길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 점 무엇보다 먼저 물 아껴 쓰기,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서울시민 1인당 1일 급수량이 500리터이며 전국적으로는 409리터(1997년도)인데, 독일 베를린 시민은 270리터 밖에 안 쓰고 있음을 부언해 둔다.

말하자면 우리가 너무 물을 낭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일 국민 개개인이 물 사용량을 10%씩만 줄여도 나라 전체적으로는 연간 총 4억8천만톤의 물을 절약함으로써 약 2400억원 상당의 수돗물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만한 실질효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다만 물 절약이라는 문제가 그 특성상 정부의 정책 추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며, 국민 모두의 능동적 참여가 없는 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든 낭비하는 행태를 가리켜 "물 쓰듯 쓴다"고 빗대며 살고 온 우리들의 생활속성과도 무관치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물에 대한 인간의 의존성이 절대적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마실수 있는 깨끗한 물의 귀중함과 고마움을 절감할 줄 아는 가치판단 기준이 서둘러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환경마크가 부여된 절수형 수도꼭지나 샤워꼭지 및 수세식 변기 등의 사용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생활 용수를 절약함은 물론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고양하고 아울러 물 관련 환경산업도 육성하는 것이 필연적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점 중수(中水)제도의 조기 실현·보급의 극대화가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무려 47개 항목의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게끔 막대한 정수비용을 들여 처리한 상수도물을 수세식변수나 청소용 또는 목욕탕 용수로 남용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이다. 관광지 오천 사우나탕이나 시내 대중목욕탕에 갈 때마다 마구 물을 쓰는 사람을 보면 울화통이 터질 때가 있다. "제집에서 샤워할 때에는 저렇게 막 쓰지 않을 터인데...?" 하는 탄식도 나왔었다. 이런 때에는 가뭄이 극심했던 '70년대 중반 국민의 자발적 절수 운동을 유도한 끝에 물 소비량을 10~30%를 줄일 수 있었던 영국정부의 성공 사례를 떠올리곤 했다. 그리고 수세식변기 수조에 벽돌 한 장을 넣어 절수하는 아이디어가 한 가정주부에 의해 제안되어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절수형 수세식변기 얘기가 나온 김에 할 말이 하나 있다. 1992년에 출범한 환경마크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 때 환경마크제도를 명실공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부터 환경마크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사용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건의가 제도화 과정을 마무리 짓는데 무려 2년이 걸렸던 것이다. 똑같은 정부부처인데 이처럼 환경보전 마인드가 부족한데 대한 서글픔이 한심스러우며, 아울러 환경마크를 부여받은 물 절약형 수도꼭지나 수세식변기의 판매 현황이 어떠한지 또 그 절수효과는 어떤 정도가 되는지 묻고 싶다. 이 점 담수 자원을 단순히 수문학적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경제문제와 직결된 국민생활을 좌우하는 중대사안임을 재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말 한 환경전문 주간지 1면에는 관광지로서 이름난 한 지역 소재 호텔과 공공시설등 다중(多重)·이용시설에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오수정화조에서 나온 더러운 물을 땅속으로 흘려 보냈다면 숨 쉬는 땅과 지하수가 오염될 것이 우려된다는 가사가 실려 있었다. 필자는 스스로의 눈을 의심하면서 끝까지 읽어내린 충격적인 고발내용이었다. 규제

만능주의시스템이 되어야만 그런 행위를 앉겠다는 뱃장인지 참으로 기가 막힐 기사 내용이었다. 문제는 이런 몰상식한 반윤리적 행위가 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공든 탑을 한꺼번에 도괴시킨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팔당호·대청호 등 주요 호소주변에 설정한 특별대책지역에 신규 오염원의 입지를 제한하는 등 상수원 주변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정부를 조롱하는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련의 소수인에 의해 이어진다면 전체가 파멸될 것이 명백한데 무릇 우리의 미래가 까마득하게만 느껴진다.

따라서 다중 이용시설이나 공공시설의 경영 책임자의 환경보전마인드 정립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기업이 그린마케팅시스템을 하루 빨리 도입하여 환경친화적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몇몇한 환경경영 체제로의 진입에 힘을 쏟기를 바란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 모두가 ESSD적 조직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려면 Top-down형이 아닌 Bottom-up형의 참신한 조직문화가 강하게 요구된다. 가령 2000년도 한국능률협회 "에너지대상"을 받은 삼성코닝(주)은 에너지효율 전담 연구팀을 구성하여 애 쓴 결과 연간 에너지비용의 10%이상인 61억원 내지 79억원(이 금액은 경기도 분당 소재 38평형 아파트 25채 내지 30채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임)을 매년 절약한바 있는데, 현장 직원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최고 경영진이 적극 받아들여 공정개선을 비롯 불필요한 에너지사용을 줄인 성과였다. 매년 2000건을 넘는 아이디어가 만발한 LG유화의 경우 또한 같다. 그리고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등 환경캠페인을 17년간 해오면서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킨 유한킴벌리가 제품생산의 설계·제조·운송·판매·서비스 등 전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 경영을 해 온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대 표적 사례이다. 이 점 지난해 12월 초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2회 최고 경영자(CEO)환경 아카데미에서의 발언내용은 매우 고무적이다. 가령 환경경영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전경련 환경위원장)라고 강조한 것이나, "환경보전을 새로운 사업기회로 인식해 경영진부터

적극 대처해야 한다”(LG 환경안전연구원장)는 주장이 그 예이다. 또 “정부는 환경친화적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마크제도 대상 제품을 현재의 40개에서 70개로 늘리고, 건물의 설계·시공·사용 단계별로 환경 성과를 평가하는 그린빌딩 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환경부 환경정책국장)이라고 밝혔다.

바야흐로 건물기후학(Building Climatology)을 비롯한 몇가지 청정공학부문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기후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것이 생산 차질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잘 대비하면 국내총생산(GDP)이 0.3% 감소하는데 그칠 것이지만 대비를 잘못하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10배 이상일 것”(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라고 개진한 대목도 유의해야 할 발언내용이라고 본다.

그린마케팅과 관련된 국제적 추세는 이제 국가 환경정책 결정권자는 물론 국내 경영자에게도 폭넓게 이해되고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 이 점 1996년에 출범한 IHDP(International Human Dimensions Programme on Global Environmental Change : 지구환경변화의 인간차원 연구계획)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중 IDGEC(Institutional Dimensions of Global Environmental Change : 지구환경변화의 제도적 측면)와 IT(Industrial Transformation : 산업사회의 변환)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내용과 연구결과 그리고 이것들이 기업 경영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를 기업의 최고 경영진이 예의주시해서 이들을 본질적으로 잘 소화(消化)해야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Green Marketing 전략의 수립·시행에 성공할 것이고 국제경쟁력을 쉽게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21세기를 생태계중심(ecocentric)의 세기라고 일컫고 있다. 건전한 생태환경의 조성을 위해 우리 인류는 모든 슬기와 힘을 실어야 할 오늘날이다.

막 시작한 2001년은 한국방문의 해이고 2002년은 월드컵 축구경기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친절과 미소로 이 두 이벤트를 맞이하자는 캠페인이 한참이다. 그러나 환경이 쾌적하지 않은 가운데 보여주는 친절과 미소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또 환경은 쾌적하게 일구어 놓았지만 무심코 행하는 몰상식한 행위(피던 담배꽂초나 씹던 껌

또는 휴지를 아무데나 함부로 버리는 행위, 운전자가 주행중 창문밖으로 가래침을 뱉는 행위)등은 외국인 방문객의 불쾌감을 증폭시기기에 충분할 것이므로 환경에 대한 올바른 윤리관을 생활화시킴으로써 또 하나의 도약을 기약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그간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친 환경보전 관련 국가 선언을 한 바 있다.

UN인간환경선언 20주년을 맞이했던 1992년도 세계환경의 날(6월5일)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 선언문을 선포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함께 국가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천명하바 있다. 1996년 3월 21일에는 “자연과 상생(相生)하는 환경공동체 건설을 위한 대통령의 환경구상”을 천명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후손이 대대로 살아가야 할 이 땅의 환경을 깨끗이 보전하는데 솔선수범하는 환경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다. 제25회 세계환경의 날(1997년 6월 5일)에는 물질 만능주의의 극복과 정신문화의 창달, 환경정의(正義)의 추구, 과학기술의 환경친화성 증진 및 책임분담과 협력 극대화 등을 담은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5일에는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생명공동체 건설을 위한 새 천년 국가 환경비전”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이들 일련의 선언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상황이다. 입으로만 지속가능한 개발을 들먹이며, 환경친화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상품이다. 생활공간을 “그린”이라든가 “녹색” 운운의 수식어로 위장한 후안무치도 구역질이 나지만 전시(展示)행정에 그친 잘못된 전철만을 재발치 않게끔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급 인사들(Social drivers)의 보다 지속적이며 의미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새해를 맞이해서 물과 에너지 등 모든 자원을 환경친화적으로 슬기롭게 활용해야 한다고 재삼 강조해둔다. 제2의 금융위기문제가 나도는 뒤숭숭한 나라 경제사정을 염려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머지않아 정착해야 할 환경경영시스템이다. 세계의 흐름을 정확히 터득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되 3R과 아나바다운동을 거대 국민운동으로 전개시켜 환경경영시스템의 뿌리를 내리게 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있는 밝은 미래를 우리 스스로가 열어야 할 것이다. **環境保全**